

기획특집

신(新)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경제환경도시부 책임연구원 엄 상 근

안전은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이다. 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안전대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범죄와 재난·재해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안전도시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실현이 앞당겨 질 수 있다

1. 들어가며

안전(安全, safety)은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으며 위험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범죄 발생¹⁾ 및 재해 피해의 증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정책 및 제도는 안전의 개념이 도시나 지역에서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정책 및 제도는 교통안전, 화재안전, 산불안전, 가정생활 안전, 어린이 안전, 놀이터 안전, 스포츠 안전, 물놀이 안전, 공공장소 안전, 성폭력 안전 등으로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임운택 외, 2012).

1) 우리나라 전체 범죄는 2000년 1,867,882건에서 2004년까지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조금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1,917,300건에 이른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최근 안전에 대한 대책이 주목 받기 시작한 이유는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정부²⁾의 5대 국정목표 중 국정목표 4(안전과 통합의 사회)의 추진전략 14(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추진전략 15(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가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안전분야는 그동안 후진국형 안전 불감증에서 국민안전 제일주의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기조전환과 연결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에 대한 주민의 강력한 요구 증대, 삶의 질 향상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등의 여건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안전의 범위를 논하기보다 도시 및 지역계획 차원에서 범죄예방과 재난·재해 대응책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안전도시,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 및 재해현황을 살펴보고, 도시 및 지역계획 차원에서 안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 박근혜정부 안전 관련 국정과제

추진전략	국정과제
Ⅳ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83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8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85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86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환경 조성
	87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88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89 법과 질서를 존중 하는 문화 구현
	90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Ⅴ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92 총제적인 국가 재난 관리체계 강화	
93 항공, 해양 등 교통 안전 선진화	
94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95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96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9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자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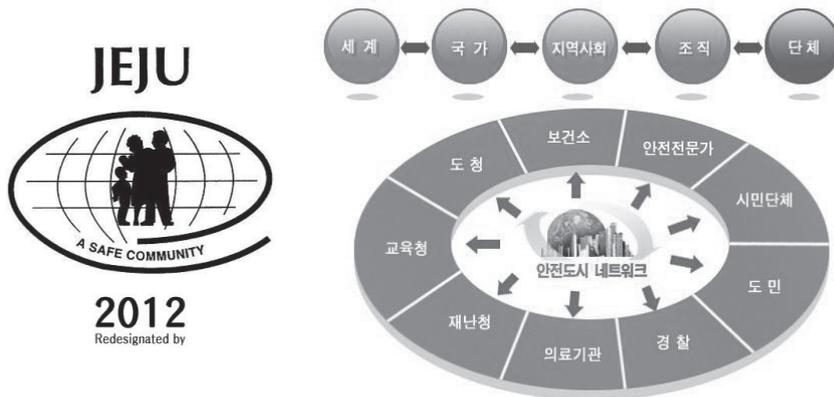
2) 박근혜정부는 5대 국정목표(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2. 맞춤형 고용·복지,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23개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2).

2. 안전과 안전도시

안전(safety)은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범죄의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언급된다. 안전대책은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서 크게 국방, 치안, 소방방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국방과 치안은 국가가 담당하고, 소방방재 업무³⁾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방방재 업무 이외에도 치안 부분⁴⁾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을 받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대책이 도시 및 지역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 안전도시이다.

국제적으로 안전도시의 개념이 이슈화 된 것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차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에서이다. 여기에서 안전도시의 개념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정의되고 있다(국토연구원, 2011.6).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림 1〉 제주국제안전도시 추진 개념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2

3)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에서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에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등이다.

2007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로는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Safe Community Jeju)로 공인되었고, 이후 지난 2012년 8월 재공인 되면서 안전도시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지속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12년 국제안전도시 관련 대책을 보면, 10개 안전분야에서 24개 사고예방 프로그램, 79개 단위사업이 추진되었다.

국내의 안전도시는 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행정안전부(2010)는 안전도시를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형성하여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및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수원시(2002.2), 서울시 송파구(2008.6), 제주특별자치도(2007.7), 강원도 원주시(2009.4) 등을 안전도시로 공인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사업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년)의 15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2009년 10월 선정된 국내 안전도시 공모를 통해 9개 지방자치단체를 한국형 안전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안전도시 선정 시, 인센티브로 특별공부세 5원을 지원하고, U-City사업과 연계하여 U-Safe City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시하였다.

〈표 2〉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도시와 주요 사업(2009년)

지방자치단체	주요 계획 내용
경기 과천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충남 천안시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월드베스트 천안
전북 익산시	•여성부의 여성친화도시 1호로 선정 지역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건설
대전 대덕구	•주민참여 안전포인트제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거버넌스 안전 네트워크 구축
광주 남구	•생생 하우스 안전망 구축
대구 동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계기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적용 •전 국민의 안전 마인드 고취
강원 횡성군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안전도시 적극 구현
전남 장흥군	•사람중심의 사고 및 범죄가 없는 안전도시 추진
경남 함양군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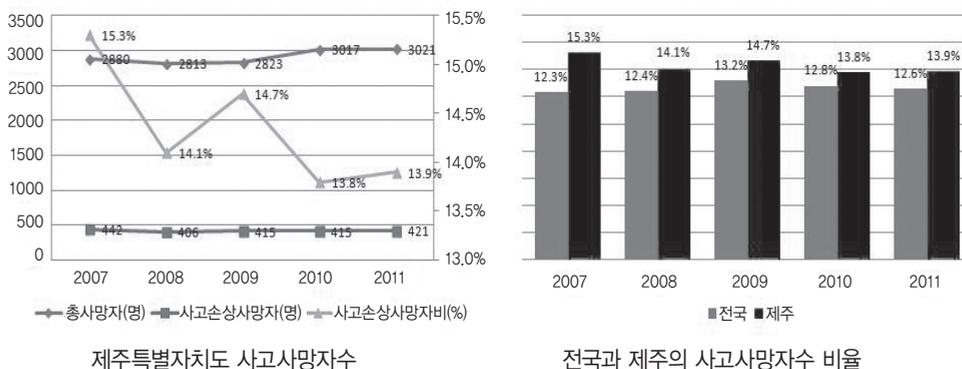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2010

3. 제주의 범죄와 재난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로 2012년 재인증 된 시점에서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자료 중 사고사망자수와 원인별 현황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망자수는 최근 5년(2007~2011년) 간 14,554명이었는데, 이는 연평균 2,911명, 1일 평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수치이다. 사망원인⁵⁾ 중 안전사고와 연관되는 사고손상사망자는 2,099명(14.4%)이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고손상사망자는 2007년 442명(전체 사망자의 21.1%)에서 2008년 406명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까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사망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5.3%에서 2011년 13.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고손상사망자수를 전국과 비교해 보았다. 전국의 5년(2007~2011년) 간 사고손상사망자수는 총 158,362명이고 이중 제주특별자치도는 1.3%(2,099명) 수준이다. 여기에서 전체 사망원인 중 사고손상사망자수 비율은 지난 5년 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1~2% 범위에서 높았다. 이는 제주지역이 안전사고에 관련된 사망자수 비율이 전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사고사망자 추세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5)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5년간(2007~2011년) 사망 10대 원인은 신생물, 순환계통의 질환, 사고사망자,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2).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2007~2011년) 간 사고손상사망자에 세부 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837명(39.9%), 운수사고 521명(24.8%), 추락 111명(5.3%), 물에 빠짐(익사) 75명(3.6%), 가해(타살) 69명(3.3%),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26명(1.2%),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19명(0.9%) 순이었다. 원인별 특성은 고의적 자해 원인이 2009년까지 증가한 이후 유지되고 있으며 운수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또한 2011년의 추락사고, 익사 사고도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사고손상사망자 원인별 추세

(단위 : 명)

사망 원인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442	406	415	415	421
•운수사고	117	103	77	114	110
•추락	24	20	17	19	30
•물에 빠짐(익사)	25	9	15	9	17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6	10	2	6	2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6	2	3	4	4
•고의적 자해(자살)	139	162	183	177	176
•가해(타살)	25	11	17	8	8
•기타	100	89	101	78	7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2

한편, 전국적으로 재난·재해와 관련된 자연재해, 화재 및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 3년 간 발생건수 113만건, 사망자 28,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10년간(2001~2010년)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사망 및 실종자는 23명, 이재민 10,657명, 침수면적 39,662.1ha, 피해액 275,522(백만원)이었다. 또한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발생 건수 17건이며 매년 2~3회 정도 영향을 미치고, 주로 7월~8월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태풍 최대 풍속기준 50knot⁶⁾ 이상 태풍이 7회 발생하였고, 최근 들어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6) 노트(knot)는 선박, 조류(潮流), 항공기, 바람 등의 속력(速力)을 나타내는 단위로 기호는 kt 또는 kn이며 1시간에 1해리(1,852 m)의 속력이 1kn이다(두산백과).

〈표 4〉 제주지역 풍수해 발생 현황

구분	사망 및 실종(명)	이재민(명)	침수 면적(ha)	피해액(천원)					
				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2001년	3	-	-	1,473,517	-	848,450	-	-	625,067
2002년	-	505	8,507	60,776,939	1,075,400	1,275,025	52,872	41,557,077	16,816,565
2003년	3	390	10,446	54,368,638	1,673,000	484,643	816,296	37,040,622	14,354,077
2004년	-	98	4,390	9,318,000	-	22,511	3,351,664	5,791,000	152,825
2005년	-	3	-	4,512,000	30,000	27,000	37,000	1,814,000	2,604,000
2006년	2	3	1,541	2,088,000	15,000	15,000	7,000	1,546,000	505,000
2007년	15	9,602	13,535	131,135,245	1,740,000	658,889	7,046,356	97,839,000	23,824,000
2008년	-	-	-	-	-	-	-	-	-
2009년	-	-	136.1	5,076,036	33	3	4,210,000	782,000	84,000
2010년	-	56	1,107.00	6,773,751	75,000	1,586,720	39,481	953,147	4,119,403
합계	23	10,657	39,662.10	275,522,126	4,608,433	4,918,241	15,560,669	187,322,846	63,084,93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4. 제주의 안전대책

안전대책은 자연재해, 교통, 산업, 식품안전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 도시 차원에서는 방재, 방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디자인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안전대책은 재해 유형에 따라 자연재해(태풍, 홍수, 가뭄, 지진 피해 등)와 인위적 재해(교통, 화재, 범죄 등)로 구분된다. 최근 자연재해는 기후변화 등에 의해 그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이고, 인위적 재해도 도시화에 따른 시설물 등의 복잡화와 노후화, 사회적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안전대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대책은 크게 자연재해 대응 방재대책과 인위적 재해 대응대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한 국제안전도시로서 이후 타 지역보다 안전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안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여건변화

의 시점에서 제주안전도시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안전도시 대책에 대해 몇 가지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재해의 대책으로 방재도시계획의 개념이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방재(防災)는 폭풍, 지진, 홍수, 가뭄, 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최근 자연재해와 연계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을 포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임운택 외, 2012). 방재도시계획 적용방안으로 도시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방재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지침의 제시, 재난·재해 관련 용도지구 지정 등도 검토할 수 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방재체계 구축은 도시의 방재기능을 향상시켜 도시안전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사전예방적 방재체계의 흐름인 첨단기술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IT 요소를 연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 내 건축물과 시설물, 인프라 건설에 IT 기술을 적용하여 재해 위험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다. 금번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92.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전략의 유비쿼터스형 국민 중심 안전망 구축)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도시시설물 계획 및 설계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⁷⁾을 적용하는 것이다.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부녀자, 외국인 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시설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고, 주택, 공원, 학교, 도로 등 도시공간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도시범죄 예방차원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물리적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기존 도시시설물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담장, 학교 놀이터, CCTV 등 도시시설물에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CPTED 개념을 적용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침과 조례를

7) 유니버설디자인은 환경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접근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신체능력의 인구를 수용할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Supportive Design), 수용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안전한 디자인(Safety-Oriented Design)의 4가지 원리가 있다(김명수, 2011.1)

8) CPTED는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공간환경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임으로써 주민들의 범죄발생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범죄 예방 기법을 일컫는다(국토연구원).

통해 제도화가 시도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표 5 참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 및 주택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등에 CPTED 설계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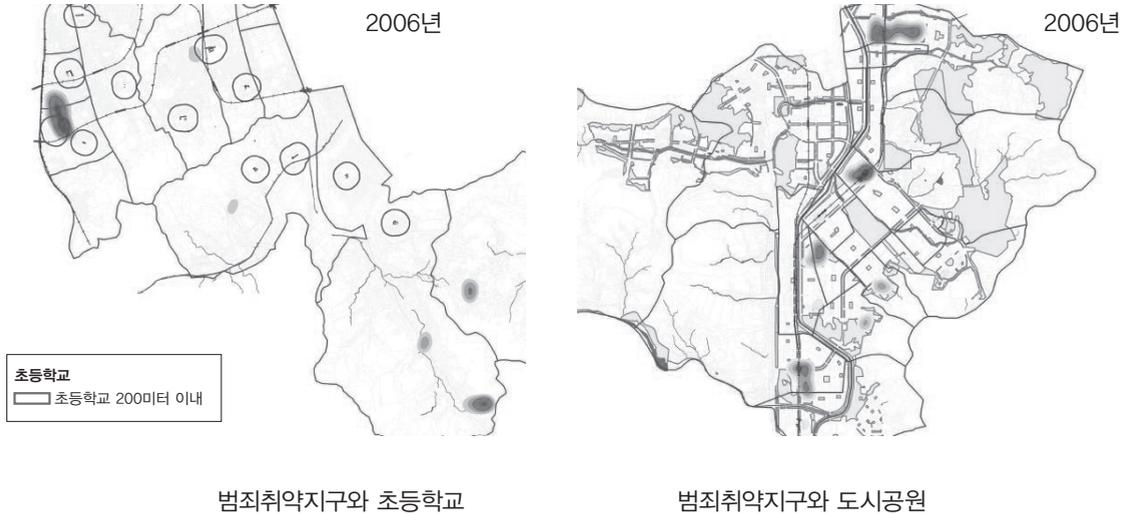
〈표 5〉 국내 CPTED 추진 현황 및 사례

구분		주요 추진 내용
중앙 정부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신도시계획 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마련(2005) •미래도시 비전 2020 4대 목표, 10대 전략 중 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조항 포함(2009)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도시 평가사업 시행(2010)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안전지도 제작(2011)
지방 정부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범죄 없는 시설 및 공간 만들기 사업(2009) •뉴타운 사업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의무화(2010)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fe Inchenon 만들기 사업
	부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도시 지정 •재건축·재개발 지역 범죄예방 설계지침과 조례 개정
	대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및 범죄예방 등에 초점을 맞춘 건축심의규정 개선안 시행(2011)

자료 : 문태헌, 2012. 6

다섯째, 범죄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범죄지도의 체계적 작성이 필요하다. 범죄지도는 범죄와 관련된 위치와 시간정보의 지도화 과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해석될 수 있다(김영호, 2011). 이러한 범죄지도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구축되면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 도로, 학교, 주차장, 공원 등 주요 도시시설물이 GIS로 잘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의 범죄 관련 자료를 포함시키면 범죄의 시·공간적 특성분석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체계적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범죄지도 작성 사례



자료 : 김걸·강호제·이재용, 2012

여섯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안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IT 기술을 활용·연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 사례는 u-서울 안전서비스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의 CCTV나 USN(전자태크) 기반 개별 안전시스템을 연계·통합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복투자 방지 및 호환성을 높이는 사업이다(서울시, 2011.9.21). 2011년 서울시는 「u-서울 안전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⁹⁾하여 2014년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IT기반 안전서비스는 찬반의 논쟁이 있지만,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9) 서울시는 ① 대상 확대 : 'u-서울 안전존' 보완 개편해 588개 전 초등학교 약 56만명 확대, ② 위치 확인 범위 확대 : 초등학교 반경 300~500m 내외-서울시 전역, ③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어린이 약 5만 명 무료 서비스 등의 계획을 제시하였다(서울시, 2011. 9.21).

〈그림 4〉 u-서울 안전서비스 개념도



자료 : 서울시, 2011.9.21

5. 나가며

최근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시 및 사회가 고도화되고 재해 및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안전대책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제시 등의 여건변화 시점에서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시 및 지역정책 차원에서 범죄,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물리적, 프로그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재해와 범죄에 안전한 도시정책은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제주가 보다 나은 안전도시가 되려면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등이 재해와 범죄예방의 지역환경이 조성될 때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 **JDI**

*참고 문헌

- 국토연구원, 2012.6, 용어풀이 166, 국토 통권 368호
- 김걸·강호제·이재용, 2012, 범죄의 시공간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김명수, 2011.1,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국토 통권 351호, 국토연구원
- 문태현, 2012.6, 범죄예방과 두려움 감소를 위한 환경설계 사례와 시사점, 국토 통권 368호, 국토연구원
- 서울시, 2011.9.21, 'u-서울 안전서비스' 2014년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보도자료
- 임윤택 외, 2012. 12, 도시안전과 디자인, 도시정보 369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2,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 제주특별자치도, 2012, 제주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고예방프로그램」추진성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http://www.kic.re.kr/>)
- 행정안전부, 2010, 안전도시사업 운영 매뉴얼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